

‘코로나4년차’ 끝이 보인다...중국발 변수

2020년 1월20일 첫 확진 발생 후 4년째 접어들어 WHO ‘엔데믹’ 거론...국내 마스크 해제 기준 발표

코로나19 사태가 4년차를 맞이하면서 ‘엔데믹’을 향해가고 있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폐기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국내 일상회복 속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020년 1월20일, 올해 햇수로 4년째에 접어들었다.

지난 3년과는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이 가시권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활용해 감염과 중증·사망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70여개국 보건장관 및 국제기구가 참석하는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GHSA) 장관급 회의가 열려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평가하고 미래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올해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 사태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12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관련해 내년(2023년) 1월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진자의 7일 격리,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등이 있다.

특히 마스크와 격리는 국민 일상에 영향을 주는 강제적 조치로,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강력한 수준의 제재가 장기간 이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지난달 2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고위험군과 특정 시설을 제외한 일반 국민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1단계 전환을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 가지다.

대전에선 1월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통보하고 그 이후 정부의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1월 중 가시적인 조치가 기대됐지만 최근 중국발 변수가 급부상하면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세계 각국이 백신과 치료제를 바탕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할 때도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던 중국은 최근에서야 방역의 빗장을 풀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한 중국발 항공기에서 승객의 52%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발 전 세계적 유행 재확산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위험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이번 달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 강화와 격리, 단기 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축소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건은 중국에서 새롭고 치명적인 변이가 발생하느냐 여부다. 유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 바이러스가 생존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진화를 하고 그 결과로 변이가 발생할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

내과 교수는 “중국은 기본 접종률은 높지만 부스터 접종이 안 되다 보니 변이가 출현하기 쉽다”며 “중국 정부에서 변이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격리 해제 등 방역 완화 조치는 모두 이번 동절기 유행 안정화와 연결돼있다. 중국발 유행이 확산해 우리나라의 유행도 증가할 경우 일상회복의 속도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실 연휴 전후로 완전히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기에는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자율화를 해도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확진자가 늘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 여론에 따라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험을 봐도 유행의 정점은 1~2개월 있으면 지나간다”며 “이 시기 동안만 잘 대응하면(실내 마스크 해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강진소방, 용접·볼티주의!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조사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강진군 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양소방-119생활안전순찰대, 특별한 중무식 개최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가 중무식을 대신해 어려운 이웃을 찾는 따뜻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여수소방, 김현서 소방장 제9회 '올해의 영웅소방관' 선정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제9회 '올해의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된 김현서 소방장에게 도지사 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완도소방, '안전으로 이어지는 섬' 빙그레 CPR 교육 프로그램 운영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겨울철 동안 도서지역(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빙그레 CPR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주 광산구, 전 직원 제설작업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광주 광산구청 (청장 박병규)은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에서 지난 사흘간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임형택기자



완도해경, 낚시어선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지자체(완도 해남 장흥 강진) 낚시어선 종사자와 동절기 낚시어선 안전운항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 도발한 北...지속되는 강대강 대치



북한이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새해에도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오전 2시50분경 북한이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400여 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

북한은 계묘년 첫날인 1월1일부터 도발을 감행했으며, 전날에 이어 이를 연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SRBM 3발은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동식발사대(TEL)을 통해 발사된 뒤 350여 km를 비행한 후 동

해상에 탄착했다. 군 당국의 분석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정보를 종합할 때 북한이 전날 발사한 SRBM은 고체연료 형태의 KN-23-25 미사일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스커드 미사일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북한이 발사한 SRBM과 관련해 세부 제원은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해에 총 30여 회, 70여 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이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8차례였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400여 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이를 연속 도발

이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우리 국방당국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월 30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국내를 넘어 일본에 서까지 관측됐던 만큼, 북한 지역에서도 육안으로 확인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국방부는 공지를 통해 지난 달 30일 “오늘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를 비행 시험했다”고 밝혔다. 또 “우주안보·경제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 “이번 비행시험은 지난 3월 30일 비행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향후 몇년간 개발과정을 거쳐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국방부는 올해 3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우주발사체 시험 성공은 그로부터 약 9개월 만에 이뤄졌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

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발사 준비까지 마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우리 군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갖게 되면 소형 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독자적으로 올릴 수 있다.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 성공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보다 앞선 기술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이번 도발로 새해에도 남북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실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1월을 맞이하고 있다”며 “인민군대가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더욱 강화되고 혁명무력 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게 됐다”고 자평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고체연료 엔진 실험과 정찰위성 발사, SRBM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26일에는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켰으며, 이 중 1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KA-1 경공격기와 전투기, 전투헬기 등 20여 대를 출동시켰으며, 북한 지역으로 우리 군의 유·무인 정찰기를 투입하기도 했다.

서선욱기자

‘이태원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이번주 송치

이태원 참사 관련 지방정부 관계자 첫 송치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번주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늦어도 오는 4일 박 구청장과 최보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검찰에 구속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26일 박 구청장과 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집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대

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할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구청장은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사유에도 해당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지난해 27일 브리핑에서 “(박 구청장의 경우)

재난안전 1차적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다중이 운집해 안전사고가 예상되에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사고 전후 상황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실한 재난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점이 영장실질심사에 고려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본은 앞서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정보 경찰 3명을 검찰에 넘겼고, 이어서는 이일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직원 4명을 송치했다.

경찰관 외 인사가 이태원 참사 책임

으로 검찰에 넘겨지는 것은 박 구청장 등이 처음이다.

용산구청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암사’라는 표현이 담긴 신고가 접수됐음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서에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측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29분 ‘암사라는 표현이 담긴 신고가 접수됐다고 용산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관련 녹취 일부도 공개됐다.

최이슬기자